與野,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겨… 대치 속 '네 탓' 공방만

예결위, 아직 증액심사 실시 안 해
野, 김건희 주가조작·쌍특검 등
국정조사 추진에 협상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가 이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면서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는 감액 심사 후에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쌍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야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은 오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정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지도부, '희생' 혁신안 수용 안 할 듯… 공천 준비 가속화 전망

혁신위, 4일 최고위서 보고
조기해산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
공관위 출범·인재영입 등 준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희생)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희생 권고안을 정식 혁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응답 기한은 4일이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곧 총선 공천 준비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같은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을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했다.

인 위원장의 요구는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거나 공천 권한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가 이미 거절했고, 희생 혁신안은 개인 거취 문제라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4일 최고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또 해당 혁신안은 지난달 초 '권고' 형식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응답한 당내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예산안 심사 정국이라 결단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거취 문제는 혁신위나 당 지도부의 의중과는 별개로, 적당한 시기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인 위원장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혁신위는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김 대표와 지도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고자 꾸려진 혁신위임에도, 지도부가 혁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거나, 혁신위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최후통첩 응답 기한으로 제시한 4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혁신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대비해 공관위 출범과 인재영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지 않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관위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마지막 회의가 오는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가 꾸려지면 당무감사 결과와 총선기획단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인사 발표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재영입위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접촉해 '새 얼굴'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와 재직 중인 학교가 있는 경기 수원 등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된다. 인재영입위는 이번주에 1차로 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이상민, 민주당 탈당… "고쳐쓰기 불가능"

입장문서 이재명 대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당화 논란, 강성 팬덤 등을 줄곧 지적해온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사진)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자로 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당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은 이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별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음주 중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고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 신당 창당 시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이번 탈당으로 이 의원과 함께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당 내 비주류들이 연쇄적으로 당을 떠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

한동훈, 연말·연초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

〈법무부장관〉

》 1면 '장관 절반 바뀌나'서 계속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언급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후임 인선보다 김현숙 장관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특히 총선 등판론이 갈수록 힘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한동훈 장관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인사 검증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하기보다는 연말·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한동훈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과 함께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위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교체에 따른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